

【 문제-1 】 (30점)

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프레스기계 1대를 乙에게 1년간 임대하여 주었는데, 임대기간이 지나 乙이 반환한 기계를 점검하던 중 乙이 유압장치를 고장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甲은 乙에게 해당 장치를 직접 수리해주거나 수리비 등 손해의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乙은 기계가 노후하여 고장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甲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1) 甲과 乙 사이의 프레스기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과실로 기계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는 임차인은 기계를 수리하여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계약에 따라 甲은 乙을 상대로 위 기계를 수리하여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乙에게 계약상의 수리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甲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에서 甲은 위 청구에 추가하여 乙이 직접 수리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심리 후 제1심 법원이 甲의 수리 및 반환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재판하면서 항소심에서 병합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甲이 이 항소심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항소심 법원이 누락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어느 법원이 재판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상고요건이나 상고사유는 고려하지 말 것) (20점)

(2) 甲은 乙이 수리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수리를 하기로 하고 수리공장에 프레스기계를 입고하면서 이로 인한 수리비 1억 원과 수리기간 동안 기계를 임대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3천만 원 등 1억 3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프레스기계의 고장이 乙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甲이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 임대손해 3천만 원까지 청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한 甲이 3천만 원의 임대손해 부분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때 甲이 마음을 바꾸어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자신이 취하서를 제출하였던 임대손해 부분에 대해 다시 재판에 포함시켜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0점)

【 문제-2 】 (20점)

甲은 A건설회사와 주택건축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X토지에 단독주택 2채를 건축하여 그 중 1채를 2009. 5. 10. 乙에게 3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 시 3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계약에 따라 6개월 후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1억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2016. 7. 21. 잔금 1억 7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 (1) 소송 중 乙은 甲이 A건설회사와 동업하여 여러 채의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였기 때문에 이 매매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甲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甲의 주장에 따라 甲이 A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주택을 분양한 것이 아니라 甲 단독으로 乙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상의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민법 제162조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여 乙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10점)
- (2) 이 소송은 변호사 B가 乙을 대리하고 있었는데, 소송계속 중 乙이 사망하였다. B에 대한 소송위임장에는 상소의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乙에게는 유일한 상속인으로 丙이 있다. 丙이 변론종결시까지 수계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후 법원은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이를 2017. 2. 10. B에게 송달하였다. 그 후 B가 항소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丙은 2017. 3. 6. 소송수계신청과 함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 문제-3 】 (30점)

甲과 乙 사이에 甲 소유의 X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乙은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6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되, 乙이 30일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로 하였다. 또한 乙이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甲의 승인을 받기로 하고, 만약 乙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乙은 甲에게 지체 없이 위 토지를 인도하고 점유·사용기간에 대하여 점유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乙은 甲의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甲에게 계약금 및 3차분까지의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甲은 3회에 걸쳐 연체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1) 乙이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계속 중 甲은 乙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였다. 이에 乙이 소를 취하하였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최종적으로 乙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후 乙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乙은 위 소송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乙이 甲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甲의 위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다.

乙의 위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하여 甲이 乙에 대한 위 점유사용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의 중도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으로 상계한다는 재항변을 하였다. 법원에서 甲의 재항변이 받아들여져 결국 위 甲의 乙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乙이 甲을 상대로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20점)

【 문제-4 】 (20점)

甲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乙에게 1년 기한으로 2억 원을 빌려주었다. 변제기가 도래하여 甲은 乙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乙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甲은 乙을 상대로 법원에 제소전 화해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甲과 乙 사이에 甲이 이자와 지연이자를 면제해주는 대신 2017. 10. 31. 까지 乙이 2억 원의 대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였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 (1) 화해가 성립한 후 甲은 乙이 약속한 2017. 10. 31.에 대여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기다렸으나, 약속한 날이 한참이나 지나도록 乙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 乙의 의무불이행에 화가 난 甲이 화해를 취소하고 자신이 면제 해주기로 한 이자와 지연이자를 포함한 전체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0점)
- (2) 甲은 乙이 제소전 화해를 하면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이행을 재촉하였는데, 乙이 원금을 조금 더 줄여주면 바로 이행을 하겠다고 하므로 다시 법원에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甲과 乙 사이에 원금을 5천만 원 더 삭감하여 乙이 2018. 3. 10. 까지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이때 앞의 화해조서와 뒤의 화해조서의 법적 효력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시오. (10점)